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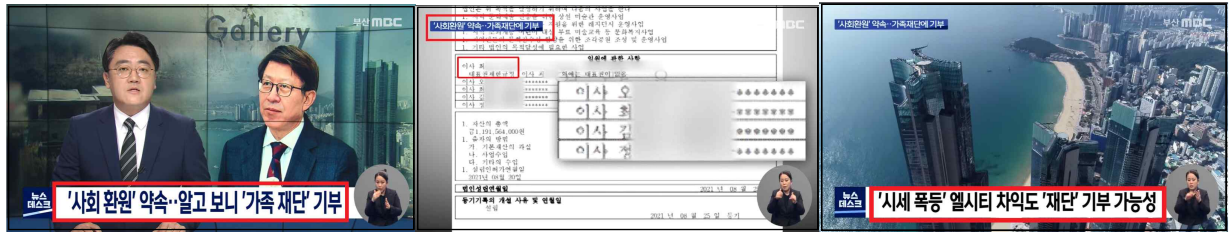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 훑어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지역언론훑어보기2022-04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지역언론훑어보기] 박형준 시장 공익 기부, 알고 보니 '가족재단' 부산MBC 보도로 밝혀 KBS부산 북항재개발 주거단지 난립 우려, 개발이익 일부 아닌 '부산시민 품으로' 강조
• 모니터기간	2022년 4월 4일~10일
• 날 짜	2022년 4월 11일

박형준 시장 공익 기부, 알고 보니 '가족재단' 부산MBC 보도로 밝혀



'사회 환원' 약속..알고 보니 '가족 재단' 기부(부산MBC 뉴스데스크 ,4/4)

지난달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2년 공직자 경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지역언론 대부분이 부산 주요 공직자의 재산 증가여부에 초점을 맞춰, 재산규모가 큰 순으로 나열해 보도했다.

부산시장의 재산 규모도 언론이 주목한 지점이었는데, 박형준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59억여 원)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박형준 시장의 재산 사회 환원 약속과 관련해 “박 시장 배우자 소유의 기장군 청광리 일대 토지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것으로 신고했다. 해당 토지는 지난 보궐선거 때 용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이번 사회 환원으로 논란에서 비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시장은 기장군 청광리에 여러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박형준 시장은 이 일대에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해명과 함께 당선 후엔 땅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땅을 한 문화재단에 기부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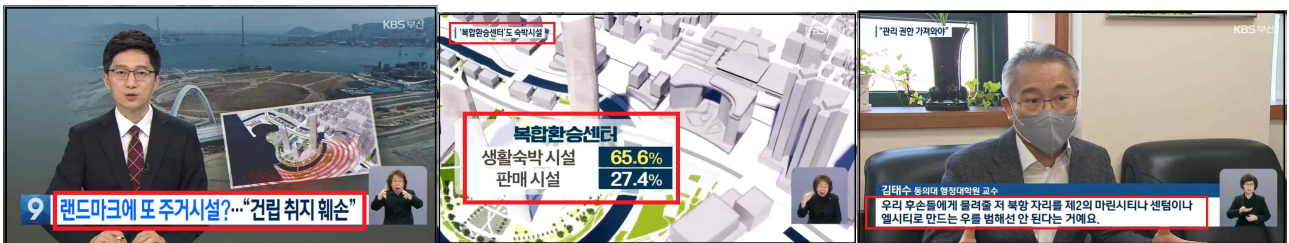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미등기 건물'을 고발했던 부산MBC는 <사회 환원' 약속...알고 보니 '가족 재단' 기부>(뉴스데스크 4/4, 윤파란 기자)를 통해 박형준 시장이 기부했다는 비영리재단에 대해 심층 취재해 보도했다.

부산MBC 취재에 따르면, 실제로 박 시장 소유의 땅 일부를 ‘청광문화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광문화재단’은 박 시장의 가족과 지인이 설립한 재단으로 주소지는 해운대구에 있는 박 시장 가족의 화랑이고, 임원에 자녀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실도 전했다. 또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엘시티 아파트 역시 양도세 면제 적용을 받는 다음 달 이후 처분하여 청광문화재단으로 기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산MBC는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박형준 시장의 재산 변동 내역과 기부처를 상세히 취재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를 약속한 것과 달리, 가족 재단에 기부한 점을 알렸다. 지역민의 알권리와 지역권력 감시에 충실한 보도로 주목된다.

KBS부산, 북항재개발 주거단지 난립 우려 개발이익 일부 아닌 ‘부산시민 품으로’ 강조

지난달 29일, 부산경실련이 주최한 '북항 1단계 재개발 공공성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부산항만공사(BPA)는 랜드마크 부지 마스터플랜안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 주거시설을 짓는 계획이 돼,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항 숙박시설로 전략하나?’ 연속보도(KBS부산 뉴스7, 뉴스9 4/5~4/7)

KBS부산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 ‘북항재개발 주거시설 계획’ 사안을 집중 보도했다.

- 4월 5일, 랜드마크에 또 주거시설?...“건립 취지 훼손”(뉴스9, 이이슬 기자)
- 4월 6일, 교통 거점 북항 '복합환승센터'...숙박시설 변질(뉴스9, 이이슬 기자)
- 4월 7일, '관리 권한 이양, 개발 이익 환원' 요구(뉴스9, 이이슬 기자)
- 4월 7일, 북항재개발, 주거단지 전략?...“제동 시급”(뉴스7, 이이슬 기자)

KBS부산에 따르면, 북항 전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부지에 주거시설이 포함되어 논란이라고 전했다. 기본 구성안에 3개의 고층 건물(45층, 83층, 90층)이 계획 되어 있고 이 중 83층 건물은 주거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이라는 것이다. 결국 고액의 아파트가 들어서 부산 앞바다를 일부 입주자들이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부산역과 원도심, 항만과 철도의 연계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복합환승센터’에도 생활형 숙박

시설이 들어선다고 보도했다. 복합 환승센터 시설의 66%가 생활형 숙박 시설이고 나머지도 판매 시설로 숙박 시설 하부 상가 개념이라는 것이다. 반면 환승시설 면적은 6%에 불과해 결국 복합환승센터 역시 주거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을 짚었다. 또 북항지구 태반이 고급 아파트 단지가 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대책도 짚었다. 부산항만공사 소유인 이 랜드마크 토지의 관리 권한을 부산시로 가져와 부산시가 공공 목적으로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임대 방법으로 난개발·투기 세력을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국가로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부산시로 환원하자는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부산은 마린시티나 엘시티 사례처럼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자연경관이 사유화된 경험이 여러 번 있다. 이에 부산KBS는 이번 연속보도를 통해 북항재개발 만큼은 일부 입주자들이 아닌 오랜 기간 희생해온 부산시민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